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작성자 : (오픈넷)

세션명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 “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일시	2019.7.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B1 소회의실	
참석자	사회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발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패널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오 (보안컨설팅트)	
		송봉화 (네티스, 대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플로어	약 30명 참여				

제안내용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에 이어, 5G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점 및 국내 시장 선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5G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잉여대역폭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 소위 고가 인터넷서비스에 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로레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6년 망사업자들 사이의 상호접속에 발신자종량제를 의무화한 개정 상호접속 고시는 망사업자 간 접속료 부담을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규제들이 도리어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요약내용	이렇게 망중립성에 관한 문제들이 뭉뚱그려진 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각종 현안에 대해 점검해보고, 망중립성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쟁점을 다루면서 망중립성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저렴하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업계, 학계, 망사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쟁점1. “망이용대가”론은 망중립성과 어떻게 화합하는가? 쟁점2.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어떤 조건 하에서 망중립성과 화합하는가? 쟁점3.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이슈인가? 쟁점4.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규칙은 망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터넷에 대해서 UN과 같은 기관에서도 거버넌스 포럼을 만들어 각 나라별로 정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힘없는 개인도 국가와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

션의 주체가 되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한 판결 당시 헌법 재판소 역시 인터넷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의 연명, 사회적 지위, 성별 등의 위계질서를 극복하고 평등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건 없이 정보를 옆으로 전달하여야 하고, 이것이 인터넷의 구동 원리이자 망 중립성에 해당합니다.

망 접속료는 사용자 개개인의 전자기기를 인터넷 망에 연결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망 이용료는 발신, 수신자가 자신의 신호가 거쳐가는 길에 모두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인이 더 이상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기 어려워집니다.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 이용료의 개념은 외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의 구동 방법을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특정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구동 방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역시 망 중립성 규범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망 시장의 경쟁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별 인터넷 접속료입니다. 2018년 상호접속료를 비교해 본 경우, 한국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한 상황에서 제로레이팅,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로레이팅은 종량제와 데이터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로레이팅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소비자가 2명 중 1명이라는 2017년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 혹은 콘텐츠를 선택할 때에도 제로레이팅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관하여, 5G는 기존의 1G 내지 4G와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5G를 사용하게 하여 지불능력이 있는 자들은 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G를 쪼개어서 고속레인과 일반레인의 차등을 둘 경우, 일반레인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사용자들은 고속레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인터넷도 프리미엄 인터넷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시 카카오톡 등의 일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원이 늘어난다고 하여 고속 라인을 구축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의 세부 내용

-송봉화(네티스, 대표): 5G를 경직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이용자에게 대한 차별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오(보안컨설팅트): 최근 상호접속 고시 개정은 비합리적인 정상 기준을 규제를 통해 도입시킴으로써 생태계 전반을 저하하고, 망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며, 망 중립성 폐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 이후의 문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서로 보내는 트래픽 양만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발신자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종량제라는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량에서 정산 기준이 변경되게 되어 개정 목표와 동떨어지게 됩니다.

-엄열(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상호 발전의 측면과 다각도로 보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이가



Fully Connected

	<p>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본 나라가 칠레와 네덜란드로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할 수 있기에 사후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이희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대하여 이의 문명사적 역할에 공감하고, 이가 최대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련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의 규모나 지위가 평등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를 전제하고 규칙을 새로 짤 것인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규칙을 짤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p> <p>-플로어(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망중립성과 5G네트워크에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p> <p>-송봉화(네티스, 대표): 패스트 라인(fast line)과 일반 라인에 모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라인을 먼저 수리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제로레이팅이 해외에서 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하여, 규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통신사가 자사 제로레이팅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드립니다.</p> <p>제로레이팅을 할지, 패스트 라인을 할지에 대한 논의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망 시장이 매우 경쟁이 낮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p> <p>사후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망중립성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규제를 한 전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p>
--	---